

문 대통령, 저탄소 KTX 탑승으로 새해 첫 경제행보 시동 “선도국가로 가는 힘찬 출발”

지난 1일 안보 메시지
2일 코로나19 극복
최우선 과제로 꼽아
한국관뉴딜 추진 박차

문재인 대통령이 4일 저탄소·친환경 고속열차 운행 현장을 찾는 것으로 올해 첫 경제 행보에 드라이브를 걸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강원도 원주를 찾아 강원 영동지역과 경북 북부, 중부 내륙을 가로지르는 KTX-이음(EMU-260) 열차에 첫 시승했다.

오는 5일부터 중앙선 원주-제천 간 노선에서 정식 운행되는 KTX 이음은 우리나라가 개발한 최초의 동력분산식(Electric Multiple Unit) 고속열차다. 동력장치가 전체 객차에 분산돼 구동되기 때문에 일부 장치에 장애가 생겨도 안전 운행이 가능하다.

KTX-이음 열차에 집권 후반기 국가 발전 비전인 한국판 뉴딜의 주요 정신이 녹아있다는 점에서 문 대통령의 새해 첫 경제행보로 낙점됐다.

저탄소 열차 운영을 통한 탄소배출량 저감(지역뉴딜)과, 4세대 철도무선망(LTE-R) 설치를 통한 SOC 디지털화(디지털 뉴딜), 중앙선 개통을 통한 중부내륙 지역 균형개발(지역 뉴딜) 정신이 고루 배어 있다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이번 행보는 한국판 뉴딜 관련 9번째 일정으로, 집권 5년 차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착실히 이행해 민생 경제의 반등을 일궈내겠다는 뜻도 담겼다.

문 대통령은 “내일부터 저탄소·친환경 고속열차가 첫 운행을 시작한다”며 “선도국가로 가는 대한민국의 힘찬 출발”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4일 오전 강원 원주시 원주역사에서 저탄소·친환경 고속열차인 KTX-이음 개통식이 끝난 후 원주-제천간 노선 열차 시승을 하고 있다.

이어 “우리에게 도로가 20세기 경제 발전의 동맥이었다면 21세기 경제와 사회발전의 동맥은 철도”라며 “그린 뉴딜과 디지털 뉴딜, 지역균형 뉴딜을 뒷받침하며 일상의 대 전환을 이끄는 힘도 철도에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KTX-이음의 개통으로 “지역경제의 활력을 높이고, 환경 오염을 줄이는 수도권과 지역의 상생을 돕는 일석삼조의 효과를 거둘 것”이라며 ▲저탄소·친환경 열차의 보급 원년 ▲교통인프라 강국 도약 ▲철도망 확대를 통한 국가균형발전 조기 실현 등 3가지를 올해 추진할 주요 정책 과제로 제시했다.

공식 신년사가 나오기 전이지만 문 대통령은 새해 행보를 통해 올해의 주요 국정 목표에 대해 메시지를 던지고 있다.

문 대통령은 새해 첫날인 1일 공군 공중조기경보통제기에 탑승해 한반도 영공을 지휘비행하며 군사대비태세를 점검하는 것으로 국민 안전·평화 메시지를 발신했다.

또 2일에는 현충원 참배를 하며 ‘국민의 일상을 되찾고 선도국가로 도약하겠습니다’라고 적으며 올 한해 최우선 과제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을 꼽았다.

문 대통령은 올해 첫 공식 일정으로 한국판 뉴딜 추진 의지를 다지는 행보를 소화하며, 선도국가 도약을 위한 주요 정책 추진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문 대통령은 현장 방문에서 중앙선 철도 복선화 사업으로 임정각(보물 182호) 복원의 기틀을 마련했다는 점도 함께 부각했다.

1941년 일제가 신흥무관학교를 설립하고 무장독립운동의 토대를 만든 독립운동가 석주 이상룡 선생의 생가인 안동 ‘임정각’ 한가운대를 가로지르는 중앙선 철도선을 깔면서 고래는 허물어졌다.

이번 중앙선 선로 변경으로 철로를 제거해 임정각 자체를 복원할 수 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문 대통령은 전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취임 첫해 광복절 축하사에서 “임정각처럼 독립운동을 기억할 수 있는 유적지는 모두 찾아내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은 “6월부터 임정각 주변 정비사업에 착수하여 2025년까지 온전한 모습으로 복원할 것”이라며 “우리 역사를 바로 세우고, 민족정기가 흐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뉴시스



전주시의회 의장단이 4일 오전 전주 군경묘지에서 신년 참배로 새해 의정활동을 시작했다.

‘시민 행복·전주 번영 힘쓸 것’

전주시의회 의장단, 군경묘지 참배로 새해 의정활동 시작

전주시의회 의장단이 4일 오전 전주 군경묘지에서 신년 참배로 새해 의정활동을 시작했다. 이날 의장단은 헌화와 분향을 하며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숭고한 넋을 기리고, 그 정신을 이어받아 시민의 행복을 위한 의정활동에 매진하기로 했다.

강동화 의장은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지방의회의 역할과 책임이 확대되어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일신월이(日新月異)의 마음가짐으로 더 큰 변화와 혁신으로 진정된 자

치분권 시대를 열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강 의장은 이어 “전주시의회는 순간의 스포트라이트보다는 전주의 백년대계를 꿈꾸며, 오직 시민의 행복과 전주시의 번영만을 바라보며 미래를 향해 나아갈 것을 약속드린다”며 “새해에도 시민 여러분의 변함없는 지지와 관심을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군경묘지 참배는 코로나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5인 이상 모임 제한 방침에 따라 2개 조로 나눠 진행됐다. /김윤상 기자

문 대통령, 공수처장 후보자 청문요청안 국회 제출

재송부 시일 지니면 임명 가능

문재인 대통령이 4일 김진욱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재가(裁可)했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이 재가한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오후 4시20분께 국회에 제출했다고 강민석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에서 전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김 후보자를 초대 처장에 지명하면서 공수처 출범의 ‘마지막 단추’인 공수처장 후보를 확정했다. 인사청문회법상 국회는 청와대가 인

사청문요청안을 제출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인사청문을 마쳐야 한다.

이달 23일까지 인사청문경보고서 송부되지 않으면 문 대통령은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 그럼에도 송부되지 않으면 임명을 강행할 수 있다.

아편에서는 문 대통령의 공수처장 인사에 대해 “정권을 위해 맞춤 제작된 공수처장”이라고 비판하며 후보자의 정치적 중립성 등을 문제 삼고 있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문 대통령이 사실상 임명 강행 수순을 밟을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뉴시스

민주 “국민생명 무관용 3법 제정 추진할 것”

노동재 최고위원 “아동학대자 신상 공개하고 형량 2배 높여야”

더불어민주당 노동재 최고위원은 4일 16개월 정인양이 양부모의 학대로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국민생명 무관용 3법’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노동재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을 지키는 국회로 거듭나겠다”며 “16개월 정인양의 가엾은 죽음을 막기 위해서라도 아동학대의 형량을 2배로 높이고 학대자 신상을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아동학대, 음주운전, 산재사망에 대해 ‘국민생명 무관용 3법’을 제

정하겠다”며 “음주운전 시 사동은 안 걸리도록 하고, 음주로 면허가 2번 취소되면 영원히 면허를 박탈하도록 하겠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통과시켜 안전 규정을 위반하는 사업주를 엄벌해 일하다 죽는 억울한 노동자가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작년 11월 청와대 국민 청원 게시판에는 16개월 입양아 학대 살인사건 가해자 부부의 신상공개와 살인죄 협의 적용으로 아동학대의 강한 처벌 선례를 만들어 달라는 내용의 청원이 올라왔다. /뉴시스

“2차 전국민재난위로금 논의 제안한다”

민주 양향자 최고위원

더불어민주당 양향자 최고위원은 4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차 확산 대응을 위해 “고통이 극심한 업종과 개인에 대한 3차 재난 지원 패키지에 더해 2차 전국민재난위로금 논의를 제안한다”고 밝혔다.

양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소비진작이나 경제 부양의 당위성만을 이야기하려는 것이 아니다. 지난 1년 코로나 가시밭길을 묵묵히 견뎌주신 모든 국민께 드려야 할 위로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일지러울 잃고, 가게를 폐업하고, 생활고로 생사기묘에 내몰린 국민이 많다. 정부를 믿고 따라주신 것에 대해 보답할 수 있어야 한다”며 “조금

만 더 버텨달라는 호소만으로는 부족하다. 큰 희생을 감내하고 계시는 모든 국민께 이 정도는 헤쳐줄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명박·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 사면론과 관련해선 “국민께서 동의할 수 있을 정도로 논의가 무르익었을 때 가능한 일이다. 정치권에서만 이야기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며 “코로나를 끝내고 경기가 활기를 띠게 할 유능한 정치를 선보여야 한다. 그럴 때 국민 통합도 가능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은 첫째도, 둘째도 국민뿐이다. 조금이라도 절박함으로 혼동해서는 안 된다”며 “무엇보다 올 한해는 집권 여당으로서 유능함을 증명해야 한다. 문자 그대로 민생에 ‘올인’해야 할 때”라고 덧붙였다. /뉴시스

